

자유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

박 찬 옥 (서울대 명예교수)

I. 머리말

고하 송진우(1890~1945)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기와 해방 직후 혼란기에 한(=조선) 민족의 자강, 독립과 건국 활동에 중추적인 지도자로서 헌신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고하가 수난을 겪는 조선민족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고뇌하며 실천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김학준 교수는 1990년에 발간된 고하 평전에서 고하의 사상을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했다.¹⁾ 고하가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임을 말한다. 이 글의 필자는 내용상으로 김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하의 사상과 실천노선을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개념이 워낙 다의적이고, 20세기 이래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자 역시 모두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나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5.16쿠데타 주체세력은 초기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고하가 바라고 건설하려던 조선민족의 독립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그것에 걸맞은 체제를 갖춘 자주독립 국가였다. 고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10대 후반 이후 사상적으로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동전의 양면처럼 일체화하여 독립과 건국 운동의 지향점으로 삼고 실행했다. 곧 고하의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수식어가 민주주의에 선행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열흘이면 3.1운동 105주년을 맞게 된다. 3개월 남짓하면 고하 탄신 134주년이 된다. 이 시점에서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고하의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향한 그의 선견지명과 지도력을 되새기 고자 한다.

II. 고하 민족주의 사상의 전개

민족주의, 즉 민족공동체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은 고하 사상의 기저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고하는 출생 시기부터 안타까운 서거까지 자주독립 국가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조선의 국권 회복, 조선민족의 자주독립 입국은 고하가 소싯적부터 마음에 두었던 간절한 염원이었다.

고하는 평생 민족불멸론을 굳게 믿고 설파하였다. 그가 중앙학교 재직 시절

1) 김학준, 《고하 송진우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서울: 동아일보사, 1990).

(1916~1919)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4천 년이란 긴 역사를 두고 닦아온 굳건한 지반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칼과 총으로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다. 우리가 모두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누가 감히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²⁾

일본이 청과의 전쟁(1894)에서 승리하고,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기에 이르렀다. 1896년 들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고하는 이 무렵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이었던 기삼연(奇參衍)의 제자가 되었다. 고하는 성리학과 성리학 질서 이외의 것을 배척하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접하고 항일의지를 굳게 다졌다. 고하는 유소년기부터 한학을 익히면서 배일하는 저항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내면화하였다고 생각된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 체결로 조선의 외교권을 침탈했다. 16세 고하가 장성 백양사에 들어가 성리학자인 김직부(金直夫)에게 수학하던 시기였다. 고하는 16세까지 개화파와 독립협회 활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하의 일대기에는 10대 중반 이전에 그의 사회적 관계나 정신세계와 관련하여 개화사상, 기독교 교회, 선교사, YMCA, 영어 학습 등에 접하거나 관심을 경주했다는 기록이 없다.

고하는 17세이던 1906년 4월 담양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신학문에 대한 열정을 돋우기 시작했고, 신학문 학습에 필요한 영어를 접하기 시작했다. 영학숙에서 인촌 김성수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고하가 영학숙에 머문 기간은 3개월 정도였지만 신학문 학습은 고하의 민족주의가 배일 저항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초를 마련했다. 고하가 일 년여에 걸친 백양사 수도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송훈(宋堧)은 신학문을 배우도록 권유했다. 고하는 1907년 18세에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적을 치려면 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하는 뜻을 같이하는 인촌과 함께 1908년 10월 군산에서 배로 부산을 거쳐 도일했다.

고하는 도일하여 중등학교 과정을 거쳐 1910년 4월 인촌과 함께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그해 10월 한일합방조약으로 마무리된 일련의 경술국치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의 국권피탈 소식에 충격을 받은 고하는 침략자 일본 땅에 하루라도 머무는 것이 치욕이라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옛 스승 기삼연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그 스승은 1907년 겨울 의병 활동 중 체포되어 그 이듬해 2월 비통하게도 총살형으로 의로운 생을 마감했다. 고하의 정신적 방향은 오래가지 않았다. 1911년 이른 봄 다시 도쿄로 돌아가 메이지 법과로 전학했다. 고하는 이 무렵 본격적으로 자유민권 사상에 심취하고 자신의 사상적 대전환을 이루었다.

고하는 자민족의 전통만을 지상으로 받드는 배타적(chauvinistic) 국수주의자가 아니었다. 서구의 근대 이후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한 자유, 평등, 민주에 관한 사상

2)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서울: Safety Play Book, 2022), 141쪽.

을 수용하여 신봉했다. 그것은 조선민족의 의로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호전적 주전론(jingoism)을 배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의 민족주의이다. 고하가 동아일보 고문으로서 쓴 명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1925)에서 일본을 배척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³⁾

“우리는 구미의 자유정신과 과학문명을 애호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국(隣國)을 도탈(盜奪)하고 인혈을 흡취하는 수성만행은 어디까지든지 배척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수성만습을 그대로 긍정한다면 인류사회는 결국에 강도의 발호에 불감(不堪)[견뎌내지 못]할 것이며, 평화의 제단은 필경은 목축의 유린에 불과할 것이 아닌가. [...] 우리로 하여금 설령 일본을 배척한다 하면 일본의 군벌일파의 침략적 군국주의를 배척하는 바이며[.]”

“현하의 일본으로도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진리를 번연히 회오하고 자진하여 조선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단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역사적 감정에 구니(拘泥)하여[얼매여] 배척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닌가.”

상하이, 만주 등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이강훈의 증언에 의하면 1926년 5월부터 1930년 1월 사이에 고하는 거액의 독립자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기도 했다. 당시 고하는 동아일보 주필에 이어 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동아일보 정간 사건 관련하여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⁴⁾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 발발부터 패망까지 전쟁을 위해 한반도를 병참 기지로 삼고,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과 동원에 혈안이 되었다. 만주에서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이간시키는 술책을 쓰기도 하였다. 1931년 7월 2일에 발생한 완바오산(萬寶山) 사건이 그 예이다. 일제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 완바오산 지역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간의 유혈 충돌 사태를 조장했다. 이 사태의 여파로 조선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보복적 폭력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중국에 있는 조선인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크게 우려되었다. 고하는 완바오산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조선인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⁵⁾ 고하의 항일 민족주의는 감정에 경도되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신중한 이성적 판단에 입각한 민족주의라는 점을 말해준다.

“만보산총돌사건을 단순하게 중국인의 조선민 압박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천려(淺慮)의 심한 자(者)다. 좀 더 냉정·침착하게 사태의 진상을 포착하고 그 이면에 잠재

3)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 자료집》(서울: 이야기숲, 2023), 83~85쪽. 고하의 저작물은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 www.goha.or.kr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위의 책, 839쪽에 전제된 동아일보 기사(1980. 5. 7).

5) 위의 책, 130~136쪽의 동아일보 기사(1931. 7. 5; 1931. 7. 7).

한 종종의 미묘한 관계를 정관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 항쟁의 대상은 중국인 지주 대 기업가 간에 일어날 것이나, 현장에서 수로개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농민이매 자연의 형세로 조·중 양 농민이 대치하게 된 모양이다.”

“만보산 이백명 동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 동포여, 우리가 조선에 와 있는 중국사람 팔만 명에게 하는 일은, 곧 중국에 있는 백만 명 우리 동포에게 돌아옴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중국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을 단연히 중지하십시오.”

고하는 일제로부터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추구한 정치적 민족주의자임은 물론, 교육자와 언론인으로서 한민족 특유의 전통, 역사와 문화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문화적 민족주의자였다.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의 보존과 발전에 애쓰고, 단군·세종대왕과 충무공을 모시는 삼성사(三聖祠) 건립 운동 등 민족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고하가 확신한 조선민족불멸론은 일제필망론으로 귀결되었다.⁶⁾ 1940년 8월 동아일보 폐간 이후에도 고하는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다. 1930년대 이후 점차 국내의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이 일본의 패망과 조선민족의 해방이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고 일제의 압박을 못 이겨 황국신민화, 일제의 침략전쟁 정당화, 조선인의 징병과 징용 권유 등에 협력하기도 했다.⁷⁾ 하지만 일제필망론을 의심하지 않았던 고하는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창씨개명은 물론 여타의 어떤 반민족 친일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칩거, 은둔, 또는 칭병하면서 해방될 날을 고대했다.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 내셔널프레스클럽 홀이 있다. 그 내부의 전면 무대에서 보면 오른쪽 벽에 첫 번째로 고하를 기리는 동판이 걸려 있다. 이 현판의 상단에 고하의 양각 부조가 있고 그 아래에는 “2017 민족언론인 송진우”에 이어 그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하 (古下) 송진우(宋鎭禹: 1890. 5. 8~1945. 12. 30) 선생은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 정치가로 활동한 민족진영의 거목이었다. 3·1운동 민족대표 48인으로 투옥되었다가 1921년 9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1945년 12월 암살범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세 차례 사장에 재임하였다. 총독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을 자행하였으나 신문사는 항일 민족진영의 본거지였고, 선생은 그 울타리가 되었다.”

6) 김준연, “고하 송진우 선생을 추모함 - 일제필망론과 동아일보 때의 이야기-”, 《신태양》, 1957, 12월호의 글은 위의 책, 513~523쪽에 재수록됨.

7) 여운형마저도 일본군이 1941~1942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점령하고 위세를 떨칠 때, 일본의 승리를 오산하고 대동아전쟁에 협력할 것과 황국신민이 되겠다고 맹세한 글과 사진이 매일신보에 실려있다고 한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145~194쪽. 해당 부분은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 자료집》의 524~557쪽에 재수록. 특히 545~546쪽 참조.

서재필기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고하를 민족언론인으로 선정한 것이다. 현판으로 헌정하여 기리는 민족언론인은 구한말 이래 이승만, 남궁억, 서재필 등인데 일제 강점기, 특히 일제의 폭압이 극심해지는 1930년대 이후 해방 이전까지 국내에서 친일 행적이 없이 백절불굴(百折不屈) 항일운동으로 일관한 언론인 지도자는 고하가 유일하였다.

III. 고하의 일본 유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형성⁸⁾

고하는 1911년 메이지대학 법과로 전학하여 1915년 7월 메이지대를 졸업했다. 고하가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시점은 1910년 와세다 예과 시절부터 1915년까지의 기간이다. 메이지대 시절에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서 활동, 유학생들과의 친교, 일본 지식인들과의 교류 등 왕성한 학내외 활동을 펼쳤다.

고하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겪으며 서구 사조와 세계정세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부터의 대전환을 성취했다. 이는 고하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형성하고 내면화하는 것이었다. 고하는 서구의 다양한 사조를 수용한 일본 지식인 사회의 동향과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정세를 세심히 파악했다. 고하는 일본에 유학하기 전 국내에서 기독교 복음은 물론이고 기독교인과의 진지한 교유조차 거의 없었다. 일본에 와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유학생 동료와 선후배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신부적(神賦的) 인간관에서 출발하는 만민평등과 같은 기독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했다. 신부적 인간관에서 사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며 동료 인간과 이웃을 향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의로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구현된다.⁹⁾

고하는 서구의 근대 이후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즉, 일반인이 개인의 권리와 자기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일반인이 주인이 되어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원리를 신봉하게 되었다. 고하는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에 속하는 1910년대 전반에 고등교육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민본, 대중정치를 포함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외치는 지식인들과 정치세력이 확산하고 있었다. 고하를 비롯한 장덕수, 김성수, 현상윤, 백남훈 등 조선 유학생들은 일본인 자유주의 지식인과 접촉하기도 했다. 도쿄제국대 정치학 교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그 대표적 예이다. 요시노 교수는 와세다대와 메이지대에도 출강하고, 조선YMCA 회관에서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조선 유학생의 독립운동을 격려했다.¹⁰⁾

8) 고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형성과 심화를 비롯한 몇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이 글은 필자가 서울 YMCA 창립 120주년(2023. 4. 27)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송진우의 삶을 통해 바라본 YMCA 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선행 발표문과 비교해 고하 생전에 같이 활동했거나 가까이 지켜본 김준연, 백남훈, 유홍, 윤치영, 이상돈, 조병욱 등 여러 인사의 회고와 증언을 많이 참조했다. 이러한 기록들은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9) 고하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지로 지냈던 설산 장덕수의 사회복음주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1: 1945년까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38~43, 429~432, 465~469쪽 등 참조.

10) 윤덕영, “고하 송진우의 근대국가 사상과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일본에 자유주의가 수입되는 시기에 서구에서는 이미 고전적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로까지 진화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 개인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통치 권력의 행사가 법에 기반을 두고 치안과 국방과 같은 최소한의 기능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존 로크(John Locke) 등의 제한정부론, 일명 야경국가론을 제시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자본주의를 역설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독점자본이 출현하는 등 자본주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는 문제의식에서 대두된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내세운 입헌주의 원리에 따른 권력 제한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공선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제 제한이나 시장에 대한 개입의 불가피성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 그린(Thomas H. Green),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 등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가에 의한 시장 개입과 복지개혁을 수용하는 이상주의적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를 제창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빈부 차이를 완화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신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하고 “neo-liberalism”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와는 내용 면에서 오히려 대척적이다.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외부의 강제와 간섭이 부재한 것을 말한다. 1950년대 후반 정치철학자 벌린(Isaiah Berlin)은 이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from something)라고 하였다. 한편 진보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 개념은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며 능동적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to do something)라고 규정된다. 이 경우에 공공선을 증진하는 국가는 개인의 자아실현, 즉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린에 의하면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소극적 의무인데 경제 불평등 해소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해당한다. 물론 적극적 자유의 이름으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국가개입의 범위는 언제나 논쟁적이다.¹¹⁾

고하는 근본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 추후 상술하는 바와 같이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사상을 받아들였다.¹²⁾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서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2016), 11~40쪽.

11) Is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1958)” in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T. H. Green,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1885) (Kitchener, Canada: Batoche Books, 1999). 벌린은 적극적 자유를 내세워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2) 필자는 2010년에 작성된 글에서 고하의 사상을 19세기 후반 영국의 이상주의적 신자유주의(new

20세기에 들어 서구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로 진전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법적으로 평등한 일반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다수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이자 체제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직접적이고 광범한 정치참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담당하도록 해서 다수지배를 실현하는 간접적 방식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었다. 19세기까지도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같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평등 우선의 민주주의가 다수 대중의 전횡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일반인 선거권의 확대를 수용하고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20세기에 들어서 바람직한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는 잠재적으로 상호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세계 제1차 대전 발발 전후의 시점에서 60여 개의 주권국가 가운데 자유선거가 치러지는 민주국가의 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10개국 전후에 머물렀다. 그나마도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에서는 세계 2차대전이 개시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이쇼 시대인 1920년대 전반 자유민주주의 국가 범주에 속했으나 후반에는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그 범주에서 이탈했다.¹³⁾

고하는 일본 유학 시절 민권과 주권재민 사상에 감동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배웠다. 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미래의 물결로 수용하고, 조선의 땅에 자유민주주의 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절실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1912년 10월 도쿄에서 조선유학생친목회가 발족했고, 고하는 총무를 맡았다. 고하는 유학생친목회 회보인 《학지광(學之光)》 창간에 나서고 편집인이 되었다. 1919년에 이르러 이 단체의 백관수, 김도연, 나용균, 최팔용 등이 2.8독립선언 운동을 주도하였다.¹⁴⁾ 고하가 메이지 법과를 졸업하기 약 2개월 전인 1915년 5월에 발간된 《학지광》 제3권 1호(총 5호)에는 그의 “사상개혁론”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고하가 서구 근대사상을 접하고 자유민주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된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상개혁론”에서는 주창한 바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공교(孔敎)[공자의 가르침] 타파와 국수(國粹) 발휘”이다.

“공교는 모고(慕古)사상의 원천이니 [...] 전제사상의 단서니 민은 가사유지(可使由

liberalism)와 연관시켜 당대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였다. 윤덕영의 2015년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하의 사상에 대하여 부연하였다. 박찬욱, “고하 선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그 현재적 의의,”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서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2016), 301~316쪽; 윤덕영, 위의 글.

13)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5~18.

14)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112~117쪽.

之)요 불가사이지지(不可使以知之)[백성은 따라하게만 하면 되지, 알게 할 것은 없다]라는 논법으로 현자정치를 창도하니 오인(吾人)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되는 원리에 배치될 뿐아니라 이른바 현자가 대대 계승될 이유도 만무하도다. [...] 민주사상이 팽창하여 자치권리의 평등정치를 실현하는 현대조류에 부적할지며 [...] 인류평등의 진리를 고조하며 사상자유를 특색을 발휘케 하는 문명사상에 반대될지라도. [...] 공교타파는 자아보호의 정당방위요 시대요구의 긴급사무라. 자(茲)에 국수(國粹)발휘를 급급(急急)코자 하노니 오인의 생명은 태백산 단목(檀木)하에서 신성(神聖) 출현하신 대황조(大皇祖)께서 창조하셨나니 [...].”

고하는 민주, 자유, 평등의 근대사상 관점에서 공자 숭상을 배척하자고 하였다. 또한 단군을 숭앙하는 애국애족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조차 중화사상에 연계된 공자 숭배를 배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고하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리학의 위정척사는 천주교를 비롯한 서구의 문물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위협을 물리치되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원리는 지키자는 것이었다. 고하가 근대적 사고로써 공자를 비판한 것은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고 당대 조선의 유림이 이 글을 읽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고하가 스스로에 대한 사상적 고뇌와 성찰을 겪고 난 후의 단호한 외침이었다. 그런데 고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조차 공자를 받드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단군을 신격으로 숭배하자고까지 외치지 않는 않았지만 예찬하였다. 이것은 서구의 근대적인 정신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에 고유한 정신과 상징을 지키려는 민족주의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제의 타파와 개인자립”의 추구이다. 여기서 타파해야 할 가족제는 혈연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문벌중심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가족제는 개인이 가문을 넘어서 보다 넓은 사회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와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기에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법적·정치적 평등을 주창했다. 하지만 고하는 사적인 이해에 얽매인 소아를 버리고 대아인 민족의 대의명분을 위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고하가 어릴 적부터 받은 가르침이기도 하다.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선의 구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제는 인재 탁용(擢用)에 함정이 될지니 문벌을 존상(尊尙)하여 귀천을 판정하며 계통을 시관(是觀)하여 반상을 구별하니 [...] 사회는 냉혹 잔인하여 화기가 상실되고 민족은 지리멸렬하여 원성이 창만(漲滿)하였도다. 물론 민족을 위하여 혈육을 희생하며 정령(精靈)을 진(盡)하는 인물에게 대하여 그 훈적을 찬송하며 경모함은 사회의 의무며 인과의 보응이라. [...] 왕후장상이 원래 종자가 무하며 위공훈명[위대한 공훈]이 특별한 한계가 무하나니 [...] 개인은 가족선(家族線)을 경유하여 사회에 도착할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사회를 관통하게 할 것 [...].”

셋째,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이다. 고하는 집안 어른이 정하는 강제 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의 발전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았다.

“강제연애는 계급결혼의 악과를 발생케 하나니 [...] 조혼의 말폐를 발생케 하나니 [...] 인생 비극이 연출될지며 [...] 작첩(作妾)의 악습을 초치케 하나니 [...] 부녀의 원한을 발생케 하였으며 [...] 강제연애를 타파함은 자연적의 진리요 인사상의 정로라. [...] 자유연애를 고취코자 하나니 [...] 만금의 부(富)가 연애를 횡단할 수 없으며 삼군의 위(威)가 연애를 쟁탈할 수 없으며 백옥(白屋)의 빈(貧)이 연애를 변개할 수 없으며 천리의 원(遠)이 연애를 소격(疏隔)할 수 없으며 지식의 역(力)이 연애를 해부할 수 없나니 [...]”

1921년 3월 12일 조선중앙YMCA는 YMCA연합회와 함께 <<청년>>지(誌) 창간호를 발행했다. 고하는 이 잡지에 남녀교제에 대한 의견을 기고하였는데, 이 단편적인 글은 개인의 이성적 판단과 자율적인 결단, 양성 조화와 문화 발전을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자 고하의 생각을 담고 있다.

“신사 숙녀의 교제는 [...] 지식을 상자(相資)[서로 공유]하며 선악을 상계(相戒)하여 이성으로 교(交)하고 신념으로 접(接)하나니 도리어 남의 강(強)과 여의 유(柔)가 서로 감화를 급(及)하며 화기를 발하여 원만한 사회가 현출될 것이며, [...] 개성의 발전은 인류의 중대한 문제다. [...] 지금까지 남자만 전횡하던 사회운동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협력하면 문화의 발전이 배나 속(速)할 것이니 만일 공동협력이 필요하다하면 그 전제로 남녀교제를 긍정할 것이다.”

IV. 고하와 3.1운동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천명한 민족자결주의는 상하이, 미국, 도쿄, 연해주 등지의 독립운동가들을 고무시켜, 국내외로 서로 연락하여 민족독립을 준비하고 요구하는 움직임을 촉진했다. 일본에서는 최팔용, 김도연, 백관수 등 조선유학생회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송계백과 이광수를 국내와 상하이로 파견하였다. 1919년 2월 8일 유학생 600여명이 도쿄의 조선YMCA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2.8 독립선언서에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신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2.8독립선언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마침내, 국내에서 1919년 3월 1일 민족독립을 위한 3.1운동이 개시되었다. 고하는 1916년 이래 중앙학교의 학감으로서, 1918년에는 중앙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육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국내외 민족운동의 기운을 인식하고 3.1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고하는 중앙학교 숙직실을 중심으로 김성수, 현상윤, 최남선, 최

린 등과 거사를 도모했다. 1919년 1월 초순 무렵 국내로 잠입한 재일유학생 송계백을 만나 유학생 동향을 파악하였고 2.8독립선언서 초안을 입수하였다. 최린은 오세창, 권동진과 같은 천도교 중진은 물론 교주 손병희의 가담을 위해 노력했다. 남강 이승훈은 기독교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크게 활약했다. 기독교와 천도교가 민족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3월 1일 민족대표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한용운이 낭독하였다. 그 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계각층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무참히 탄압하였으나, 3.1운동은 조선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는 운동을 활성화했다. 한성(서울)과 연해주, 상하이에 각각 정부가 조직되었는데, 그해 9월 상하이에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¹⁵⁾

3.1운동의 지도적 인물은 민족대표 33인과 선언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역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한 17인을 포함하여 48인이 거명된다.¹⁶⁾ 먼저, 33인 민족대표의 종교별 분포는 기독교 16인(이승훈 외 15인), 천도교 15인(천도교주 손병희, 보성학교 교장 최린 외 13인), 불교 2인(한용운 외 1인)이었다. 33인 이외의 17인 경우에는 기독교 4인(함태영 외 3인), 천도교 5인, 중앙학교 교사 2인(송진우, 현상윤), 문인 1인(최남선), 무직 3인, 학생 2인으로 분류되었다.

3.1운동의 주도자 48인 중 33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나머지 17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고하와 최남선은 이승훈과 교섭하여 기독교 인사들과 연락하였고, 이승훈은 기독교 장로인 송암 함태영, 송암은 YMCA 간사 박희도를 접촉하는 식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고하와 송암은 옥에 갇힌 사람의 가족을 돕는 등 뒷수습을 하면서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다.¹⁷⁾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919년 3월 상순 고하는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피검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제 경찰은 고하를 혹독하게 고문하였다. 복심(覆審)법원 공판의 판결선고(1920년 9월 30일)에 따르면 고하는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독립운동에 관해서 최남선, 최린 등과 협의하였고, 동교 교사 현상윤과도 협의하고 정노식[재일유학생]과 협의한 후 김도태[재령의 명신학교 교사]를 선천에 보내어 이인환[이승훈]을 경성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취조서(1919년 4월 18일), 경성지방법원 예심부의 예심결정서(1919년 8월 1일), 고등법원 특별형사부의 예심결정서(1920년 3월 22일)에서는 고하가 기독교 인사들과 연락한 “모의”

15) 김명구,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상관성,”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205~252쪽;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197~295쪽;

민경배(책임집필), 《서울YMCA운동 100년사, 1903~2003》(서울: 서울YMCA, 2003), 194~195쪽;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기원,” 《사상계》, 1963. 3월호. 이 글은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194~204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16)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상하이로 망명하여 체포되지 않은 김병조, 그리고 판결 전 구금 중 사망한 양한묵을 제외한 31인에 17인을 더하여 48인이 된다.

17) 김정희, 《송암 함태영》 (서울: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2) 참조.

단계의 “주모자”라고 적혀 있다.¹⁸⁾

고하와 기당은 복잡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내란죄 대신에 모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보안법 및 출판법의 적용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20년 10월 1일 출옥하게 되었으니 1년 반의 미결감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고하는 어머니가 자신이 옥중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났기에 불효의 한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 고하는 출소 후 고향 담양으로 내려가서 학교설립기금 모으는 운동에 앞장섰다가 1920년 겨울 3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구금되었다.

고하는 3.1운동을 겪으면서 자존과 자결의 의지를 만방에 의연히 분출한 피압박 조선 민중의 강력한 힘을 느끼고 감동하였다. 1925년 8월과 9월 동아일보에 연속 발표된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고하는 3.1운동을 전대미문의 대혁신 사건으로 평가했다. 조선민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강한 염원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민족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를 갈구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수립하겠다고 대오각성하게 된 것이다. 고하의 이 논설에 의하면, 3.1운동은 그 이전 30년간에 “갑오동란[동학농민혁명]”과 “근왕(勤王)사상의 의병운동”을 거쳐 발전하였는데, 3.1운동에서는 그 이전의 민중적 운동과 달리 종교적 배타성과 근왕사상을 넘어 “민족자유”를 갈구하는 근대적 사조가 토대가 되었다.

“1919년의 3.1운동은 조선민족에 대하여 4천 년 이래 윤회 반복하여 오던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상으로나 문화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근본적으로 민중적으로, 파괴 건설하려 하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이었다. [...] 역사상으로만 표현된 기다(幾多)의 개혁과 전란이 있었으나, 그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는 소수계급의 정권 쟁탈의 변혁이 아니면 존주양이(尊周攘夷[중국을 높이 받들고 외국인은 배척])의 사상에서 배태되며 출발하였던 것은 불무(不誣)할 사실(史實)이었다. 그러나 최근 3.1운동의 일건(一件)에 지(至)하여는 그 내용과 형식을 일변하여 적어도 사상의 근거가 세계적 대 여론인 민족적 자존과 인류적 공영의 정의 인도의 관념하에서 전국적으로도 민중적으로 도검리(裡) 철쇄간(間)에서도[칼뒤에 쇠사슬이 있더라도] 의연히 입(立)하며 태연히 동(動)하였던 것은 어찌 조선민족의 혁신운동 사상에 일대 기적이 아니며 일대 위관(偉觀)이 아니랴.”

“혹은 3.1운동을 미국 선교사의 교사(教唆)라고도 하며 혹은 천도교 일파의 선동이라 하나, 이것은 조선민족의 정신과 또한 조선사회의 사정을 몰각한 단견자(短見者)류의 어(語)에 불과한 것이요, 그 실은 조선민족의 내재적 생명이 세계적 신문화에 접촉되어 폭발된 일대 각성의 소리인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김명구 교수는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글에서, 3.1독립선언

18) 일제 강점기 법원 체계와 고하가 3.1운동 주역으로 고초를 겪는 경위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 “송진우의 삶을 통해 바라본 YMCA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202~206, 209~238, 271~283쪽 참조.

서는 “자유와 평등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념”이 밑바탕이 되었고, “민주체제를 가진 새로운 근대독립국가”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다고 역설하였다.¹⁹⁾ 조선민족이 세우고자 하는 독립국이란 대한제국 군주체제의 복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그에 적합한 체제를 갖춘 국가였다. 이러한 이념과 체제의 지향은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한성정부의 약법 각각의 제1조에 반영되었다. 이는 1948년 7월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로 유지되어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다.

V. 언론인 민족민주운동가 고하

고하는 3.1운동의 주역으로서 옥고를 치른 뒤 활동무대를 동아일보로 옮겼다. 그는 1920년대 초 이래 일제 패망까지 동아일보를 이끄는 언론인으로서 민족자강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는 민족독립을 향한 문화운동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실천이었다.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민족의 지적,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산업진흥과 물산장려운동으로 민족의 경제적, 물질적 생활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새로운 지도층의 형성으로 이어져 결국 독립된 민주국가 수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동아일보는 인촌의 주도로 고하가 옥중에 있던 1920년 4월 1일 창간되었다. 동아일보는 ①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고, ② 민주주의 지지, ③ 문화주의라는 3개 주지(主旨)를 제창했다. 창간 후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일본 왕실의 상징인 3종신기(三種神器)를 비판한 사설로 인하여 1920년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정간되었다. 정간 기간 중 출옥한 고하는 1921년 봄 주식회사 동아일보 설립에 가담하여, 그 해 9월 제3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고하는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19년 동안 사장, 고문, 주필 등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다. 고하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자강운동의 일환으로서 민립대학과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운동, 이충무공 유적 보호 운동, 브나로드 운동을 통한 농촌 진흥, 물산장려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은 정치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일제 강점기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민족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향한 정치활동이 아닐 수 없다.²⁰⁾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언론, 문화 활동이 외양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동아일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테두리 안에서 조선인의 민간 언론기관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조선 민중의 표현 통로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면 일제 총독부 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의도를 표출하였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또는 잠재적으로 반체제 언론매체였다. 그리하여 동아일보의 지도적 인물인 고하는 수시로 일제의 언론탄압에 봉착했다. 1924년 반민족적인 친일단체의 대표 박춘금이 신문 사설에 불만을 품고 고하와 인촌을 음식점으로 유인하여 권총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²¹⁾ 1926년

19) 김명구,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의 상관성,”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230~231쪽.

20)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476쪽.

3월 5일 동아일보는 국제농민회 본부가 보내온 전보문을 게재했다. 이 문건은 3.1 운동을 “위대한 날”로 찬양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2차 정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주필 고하는 그해 11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출옥했다.²²⁾

고하는 입감 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²³⁾

“나는 일찍이 24개월의 감옥 경험이 있으니 이제 새삼스러히 옥고를 놀랄 것은 없습니다. [...] 나는 심신수양기 또는 어떤 의미로 은거기인 반년이라는 수형기를 가장 의미깊게 보내고 나오려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 인촌에게 보낸 옥중 서한(1926년 12월 16일)에서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²⁴⁾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하고, 먹고 자던 나머지, 한두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오니 책이나 많이 보내 주십시오. 그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아오니, 윤리학, 동서철학사, 서양역사, 서양문명사, 철학개론 등으로 대개는 우리 집 책상에 있어오니 그중 페이지 수효가 많은 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고하는 1927년 10월 동아일보 사장에 자신으로서는 두 번째(동아일보로서는 6대)로 취임하였다. 동아일보는 한민족의 항쟁을 고무한 미국 언론인의 서한을 실었다는 이유로 1930년 4월부터 9월까지 제3차 정간 처분을 당했다. 1936년 8월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진을 게재했다 해서 다음 해 6월까지 제4차 정간 처분되었다. 그해 11월 총독부 압력으로 고하는 사장을 사임했다. 1937년 6월 동아일보가 복간되고 고하는 고문으로 취임했으나 1940년 8월 마침내 강제 폐간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후 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는 중간((重刊)되고 고하는 세 번째로 사장 직책을 맡았다.

국제기구인 범태평양협회(The Pan-Pacific Union)가 1925년 7월 제1회 범태평양 민족회의를 하와이에서 개최했다. 여기에 조선 대표로는 신흥우(당시 YMCA연합회 총무), 유억겸, 김양수, 김활란, 그리고 재미 서재필(徐載弼) 등 YMCA의 주축 인사들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주필인 고하도 초청을 받았고, 특파원 자격을 겸하여 1925년 6월 중순 하와이 방문 장도에 올랐다. 하와이 현지에서 이승만을 만났다. 고하는 8월 하순 귀국하였다.²⁵⁾

21) 위의 책, 337~347쪽.

22) 위의 책, 408~419쪽.

23) 잡지 《신민(新民)》 제2권 12호(1926년 12월호)에 실렸던 이 글은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90~92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24) 위의 책, 93~94쪽.

25)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372~377쪽; 민경배, 《서울 YMCA운동 100년사, 1903~2003》, 214~215쪽.

고하는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 이 글은 우선, 고조선부터 근대의 개국, 경술합방, 항일과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조선 역사를 통찰하면서, 민중의 각성을 이룬 조선민족의 진화를 역설한다. 그리고, 세계정세 추이의 큰 흐름을 분석한다. 열강의 침략적 제국주의, 세계대전의 발발, 레닌의 혁명,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의 균열, 일본 내정의 혼란, 미국과 소련의 대결, 독일과 프랑스의 각축과 영국의 정책, 일본의 대미정책, 중국의 내부 사정, 열강의 복잡한 동향을 짚어 본다. 끝부분에서는 조선 문제의 해결로 돌아가 일본 군부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민족의 지향목표를 논급하며 민족의 단합을 주창했다.²⁶⁾

이 논설에서 고하는 세계 양차 대전의 전간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예견하는 선각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과거의 사승(史乘)[역사기록서]에 조(照)하여 소소역력(昭昭歷歷)한 사실이다. 만일 19세기를 불란서 문화의 확충시기라고 하면 20세기는 적로(赤露)사상의 발전시대라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적로가 태평양을 격(隔)하여 양양상대(兩兩相對)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이 곧 태평양상의 일말의 의운(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불무(不誣)할 사실이다. 세계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감정(勘定)될 것은 상상키 불난(不難)할 바가 아닌가.”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거쳐 1922년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소비에트 연방)으로 거듭났다. 소련은 자본주의를 철폐하여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반제국주의를 천명하였다.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고 지식인 사이에서는 독립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하여 기대가 일어났다. 고하도 러시아혁명이 내세운 평등 정신, 조선 독립을 위한 소련의 지원 가능성에 비추어 소련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면모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미국과 소련을 냉철한 시각으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련은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난봉 행세를 하는 적로(赤露)”라고 규정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모범국”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논설의 말미에서 고하는 조선문제의 해결을 열강의 향배에 맡길 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 단결과 자력을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민족적 정의와 인도적 평화의 유지발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민족적 의혈을 불사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적 동원을 행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26)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58~86쪽.

“오인(吾人)은 외세의 파동보다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 세력의 해결을 절규 역설하는 바이다. 요컨대 조선 문제는 민족 자체의 단합이 확립하는 그 날로부터 해결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1920년대 중반 이광수, 최린, 최남선 등이 동아일보를 통해 개진한 바 있었던 “자치론”을 놓고 시비가 일었다. 특히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동아일보와 고하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고 매도(罵倒)했다. 1930년대 말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제헌국회 의원을 지낸 이상돈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²⁷⁾

“고하가 [최린, 최남선과 같이 변절하여] 친일파로 자치운동을 했다면 그 유명한 친일 깡패 박춘금이 고하와 인촌을 백주에 부하 10여 명을 데리고 집단 폭행을 할 수 있었겠는가.”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강화되어 자치운동 조차 말할 수 없었고 […]”

VI. 자유권과 생존권의 조화를 모색한 자유민주주의자 고하

이제 앞서 밝힌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더욱 심화되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서구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동반, 발전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 산업화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폐단을 초래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요청하는 바대로 국가는 방위와 치안유지에 치중하고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고집하여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자유주의이지만 사회정의와 공공복리의 실현을 외면할 수 없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진보성을 갖는 자유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자유주의는 우파, 사회주의는 좌파인데, 좌파 이념만이 진보성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말하게 되었고, 자기실현의 조건을 제공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기능을 주문하였다. 국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즉, 진보적 자유주의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상충하는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당면 과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역시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심화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의 명논설, “자유권과 생존권”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은 1925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 사설로 발표되었고, 1932년 《삼천리》 4월호에 게재되었다. 자유주의자 고하는 우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 고귀함을 일

27) 위의 책, 789~817쪽에 《신동아》 1987년 8월호에 게재되었던 이상돈의 글, “해방전후 총횡관”이 재수록되어 있다.

관되게 강조한다.

“사람으로서 자유권이 없으면 우상이며 노예다. 환언하면 인격의 내용은 자유의사가 중요한 요소이다. [...] 우리는 [...] 가장 영묘한 자유적 심리를 가진 사람이다. [...] 차라리 자유를 구하여 얻지 못하면 죽음을 구하여 얻을 것이다. [...] 자유 없는 곳에 행복이 없으며 환희가 없으며 [...] 발전이 없는 것이다. 아! 자유, 자유, 오직 이 인류의 신상(神象)이며 우리의 생명인 것을 철저히 맹성하자.”

그런데, 물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인가? 이런 궁핍한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가? 자본이 독점되고,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자본주의를 방임하면서 개인 간의 협력, 사회 발전과 인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고하는 소중한 자유권을 고양하기 위해서 생존권 역시 중요함을 주창한다. 고하는 인간이 사람됨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서 생존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존권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는 요건이다. 생존권은 생활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과 동의어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이러한 권리를 최초로 제정한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하는 생존권 보장이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고 개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여 계급 갈등과 폭력혁명으로부터 자유를 보호하는 길임을 인식하였다. 그는 자유권과 생존권은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 균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선진국가의 자본주의의 성숙됨을 따라서 그 정략이 일변하여 일층 교묘하고 악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 생존권의 보장을 기조로 하고 내용으로 하는 자유가 아니면 특수계급의 전횡방종을 조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는 평등에 있고 평등의 기조는 생존권 보장에 있을 것이다. 생존권이야말로 평민문화의 토대가 될 것이며 핵자(核子)가 될 것이다. [...] 우리가 새 생명을 개척하고 새 문화를 수립하는 전제로 철저히 생존권의 보장을 절규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고하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1910년대 중반 일본의 지성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이미 마르크스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고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사회화) 또는 공적(公的) 소유(=국유화)를 요소로 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사회주의 사상도 접했다. 그렇지만 폭력혁명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외치고 실질적 평등과 집산주의(collectivism)를 명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부류의 사회주의와는 명백히 선을 그었다. 고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잠시라도 감동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의회제도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에는 마음이 열려있었다고 보인다. 고하는 사

회주의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인지하였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러함에도 민족주의자인 고하는 계급모순의 해소보다는 조선민족이 일제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찾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생각했다. 고하는 자신이 신봉한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외연으로서 접목되는 한도까지 사회민주주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수긍했다.

“이 지구는 인류의 공유물(共有物)이다. 공유물인 이상에는 공동이 개척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共同)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획하며 이를 사유하는 것은 정의의 패려(悖戾)며 인도(人道)의 반역이다. 하물며 현재의 문화의 총화는 전인류의 공작(共作)이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향락은 공수(共受)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서 사회의 연대적 책임감이 생(生)하며 평등적 관념이 발하며 노동 숭배의 진리가 존(存)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개인으로 사회에 대하여 최소한도에 있어서 최후의 생존권을 주장할 이유가 자임하며 사회에서도 각개의 생존을 확보할 의무가 고유할 것이다.”

고하는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했다. 개인의 무절제한 사욕과 무제한의 사유재산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오히려 자원의 공동 개척과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는 개인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언한다.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권을 위협하는 러시아혁명보다는 자유권과 생존권 요구가 함께 가는 영국 노동당과 일본 무산정당을 예로 들어 의회주의적, 합법적 방식에 긍정한다. 고하는 이 대목에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다. 고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킴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문제의식에 철저한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서 그러한 것이다.

“폭력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득하여 전세계를 경이케 하였던 노농 노서아도 없지는 아니하나 [...] 합리적 운동의 경향이 유행하는 것도 불무(不誣)할[왜곡하지 못할] 사실이다. 영(英)의 노동당 내각과 일(日)의 무산정당의 출현은 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자유권을 아울러 주장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은 조선인 식민지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를 고무하였다. 일본, 러시아, 상하이를 비롯한 국외 지역과 국내에서 러시아의 조선독립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 건설을 지향하는 주장과 세력이 대두되었다. 국내에서는 1925년 조봉암, 김약수, 박헌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다. 1920년대 이후 항일운동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 고하는 사회주의 계통 가운데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철폐하고 재산의 공동소유와 경제의 국가

통제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공산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의 산업 국유화와 전면적 통제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귀결되었고 우선적 구호로 내세웠던 평등의 구현은 요원하게 되었다. 다만,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자 고하는 사회민주주의와 접점을 찾을 여지는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접근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하는 사회민주주의자로 볼 수는 없다. 1920년대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나 전면적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고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여 대체하는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용력 있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인 고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보완책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고하가 자유권과 함께 생존권을 외치게 된 것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궁핍해진 조선 민중의 삶을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소작인으로 피폐한 생활을 면하지 못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토대로 조선의 상당수 토지를 점탈(占奪)하고, 조선을 일본의 식량보급 기지로 만들었다.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관습적으로 누리왔던 경작권을 부정했다.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던 농민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졌다. 농업이 산업의 근간이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농민과 농촌이 겪는 곤궁에 고하는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였다. 경제적으로 빈궁한 민중 다수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심대한 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고하는 1929년 1월 《조선지광》에 발표된 “소작입법의 필요”라는 글에서는 백성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소작인으로서 피폐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소작인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법률 혹은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써 보장하여야 하겠다. [...] 이에 대하여는 혹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법리상으로 보아 소유권과 충돌되는 점이 있는 것인즉 불가하다고[...] 토지의 소유권이란 [...] 결코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다(多)하니 토지의 수용령과 같은 것은 이의 일레라고 하겠다. 토지의 수용령이란 것이 결국 그 국가적 이익이나 또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 이상 소작법이란 것이 그 국가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결코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소작문제가 점점 심각화하여 그 영향이 농업생산의 소장(消長)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일이오,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어떻게나 해결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지주는 무엇보다도 공존공영이라는 생각으로써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작인을 지도하여서 농업의 보다 더한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지주 중에는 간혹

각성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는 완강하여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시사(是事)로 하는 자이니 만일 지금 현상(現狀)과 같이 추진되는 때는 농촌의 피해는 더욱 심각화하여 실로 중대한 영향을 초치(招致)케 할 것이다.”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 고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조선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자유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주장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경제의 특정 부문에 대한 국가개입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하는 유학 시절부터 불행한 서거 때까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앞세우는 공산주의나 공산당 세력에 일관된 입장을 갖고 동조하지 않았다. 고하가 동아일보 2차 정간 관련한 사건으로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1927년 2월 신간회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합작으로 창립되었다. 고하는 출옥 후 신간회 경성(서울)지부에 가입했는데, 사회주의 진영 특히 조선공산당 계열에서 고하와 동아일보에 반대하며 민족주의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우선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거둬 획책한 대로 신간회는 1931년에 해체되었다. 고하의 이러한 경험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의 불신을 강화하였고 공산주의자와의 합작불가론에 이르게 하였다.²⁸⁾ 여운형이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에 가담하도록 권했으나 공산주의자 주도를 간파하고 고하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VII.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고하의 투쟁

해방 직후 국내의 정치지도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지도자는 고하 송진우와 몽양 여운형이었다.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인 고하는 사회지도층에서 가장 높은 신망을 받았고, 해방 직후까지도 동아일보 본사와 지국 등을 토대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역량에서도 가장 돋보였다. 몽양은 해방 직전 조선건국동맹과 같은 비밀조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중에 호소하는 역량이 탁월한 지도자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항복 직후 연합국 군대가 진주하기 이전 조선 거주 일본인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치안유지와 일부 행정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할 상대로서 고하와 몽양을 교섭했다. 고하는 일제와의 교섭에서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²⁹⁾ 고하는 패전 임박의 일제와 타협하는 것은 일제의 괴뢰가 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승전 연합국의 인정을 받지 않는 통치권 이양은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

연합군 진주를 기다렸던³⁰⁾ 고하와 판이하게 몽양은 총독부 제의에 신속하게 응하였

28)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425~426, 429쪽; 이철순, “고하 송진우의 독립 방략에 대한 고찰,”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 41~62쪽.

29) 일제가 고하를 상대로 벌인 치안유지 등 행정권 이양 교섭에 관련한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서는 김준연, “정계회고 1년- 해방과 정치운동의 출발-” 동아일보 1946. 8. 15. 이 기사는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483~492쪽에 재수록됨; 이인, 《반세기의 증언》(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1974), 144~145쪽; 설의식, 《해방이후》(서울: 동아일보사, 1947), 3쪽. 평전 또는 학술논문으로서는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283~300쪽; 이현주, “8.15전후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조선정치세력의 대응 -민족주의 우파의 선택과 국민대회준비회,” 《국사관논총》, 제108집, 1~34쪽 참조.

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몽양은 총독부와 교섭하고 그날 저녁으로 서둘러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몽양은 연합군 진주 이전에 건준을 중추적 정치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³¹⁾ 몽양이 고하에게 건준 참여를 권하였는데 고하는 이를 거부했다. 고하는 몽양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휘둘려 건준의 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고하의 예견과 다름없이 9월에 들어 건준의 내용은 깊어졌다. 9월 1일 부위원장이었던 민세 안재홍이 건준에서 이탈한 것을 필두로 하여 우파 인사들이 탈퇴했다. 9월 6일 박헌영을 위시한 공산주의 세력의 주도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이 돌연 선포되고 건준은 변질했다.³²⁾ 인공은 미군이 진주하기 하루 전에 선포된 것이다.

고하는 건준과 인공의 활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았다. 9월 7일 미군의 선견군사(先遣軍使)가 들어오는 날(8일 하지 중장 지휘 하의 본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진주하기 직전 날)에 고하의 주도로 국민대회준비회가 결성되었다. 이는 9월 3일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를 모태로 하였다. 그 취지서는 “우선 국민의 총의로써 우리 재중경 대한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서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연합 각국에 사의를 표명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민정 수습의 방도를 강구할 것 등”을 천명하였다.³³⁾ 인공은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의 모체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항하는 국민대회준비회는 민족주의 진영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하와 몽양은 건국 완성과 정부 수립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그 설계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 두 지도자는 타협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연합군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슴없이 고하는 입장, 몽양은 인공이라고 한 것이다.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 취지서에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일본의 정권이 퇴각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에 대위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기미독립 이후로 구현된 대한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이기에 “파당과 색별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하는 임정봉대론이 의심의 여지없는 대의명분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상하이 임정에서 활동했던 몽양의 임정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매우 놀라웠다. 임정이 국민당 정부를 따라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명맥은 유지했는데, 업적

30) 소련군은 이미 8월 9일 웅기와 나진을 시작으로 16일 청진을 점령하였다. 8월 하순 소련군은 함경 남북도 전역에서 일본군과 헌병 및 경찰관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 무렵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군이 이북, 미군이 이남을 분할 점령한다는 계획이 조선에 알려졌다. 일제는 9월 1일 미군이 9월 7일 경성에 진주한다고 발표했다.

31) 8월 17일 조선총독부는 건준에 치안권 포함한 일부 행정권, 그리고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 및 교육 기관을 인도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총독부는 건준에서 이양했던 권한을 회수했다. 연합군이 총독부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768~778쪽에 재수록된 고무로 나오키(최현 옮김)의 저서, 《아무도 쓰지 않았던 진실 -한국의 비극-》(서울: 범우사, 1986)의 해당 부분을 참조.

32) 9월 8일 공산주의자 열성대회에서 박헌영을 위시한 재건파가 장안파를 제압했다. 그 후 박헌영은 총비서, 정치국원, 조직국원을 겸했다. 조선공산당이 인공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다. 몽양은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인공 활동을 계속했으나 그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몽양은 11월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여 좌우합작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33)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323~325쪽; 《독립을 향한 집념》, 669~687쪽.

이 별로 없고, 지리멸렬했다는 것이다. 국내에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된 인사들이 많고, 해외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단체는 충칭 임정을 유일 합법하게 여기지 않으니 연합국의 승인을 받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몽양은 장덕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³⁴⁾

“설산, 나도 상해에 있어보았지만 임정에 도대체 인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소? 누구누구하고 지도자를 꼽지만 모두 노인들 뿐이고 밤낮 앉아서 파벌 싸움이나 하는 무능무위한 사람들뿐이오.”

국민대회준비회는 초당적인 합의·연합기구로 결성되었다. 고하는 정부의 운영을 주도할 세력의 결집체로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월 8일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과 국민대회준비회 측이 모여 한국민주당(한민당)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9월 16일 한민당 창당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지명도가 높은 이승만, 김구, 오세창, 이시영, 서재필 등 7인을 영수로 추대하였다. 한민당은 창당 시에 대다수가 민족진영 인사였고 친일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고하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온건 성향의 사회주의 인사도 상당수 가담하도록 했다. 이 대회와 선언은 임정봉대를 재확인하고, ‘대중 본위의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주독립국 건설의 의지를 밝혔다. 21일과 22일 총회위임에 따라 당 조직이 확정되었는데 정당 운영의 실권을 갖는 중앙집행위원으로서는 1도 1총무의 원칙에 의거 원세훈, 백관수, 서상일, 김도연, 허정, 백남훈, 조병옥, 김동원을 포함한 총 8명의 총무가 선임되었고 고하는 사실상의 당수인 수석총무로 추대되었다. 고하를 비롯한 한민당 수뇌부는 인공과 맞서 싸우면서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잠정적인 훈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근거하여 미군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0월 5일 구성된 미군정의 고문회의에 한민당 인사가 대거 포함되었다.³⁵⁾

한민당의 조직과 정강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민당 초기의 조직에 관한 윤덕영의 연구에서는 한민당 참여 세력을 ①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 출신 계열, ② 안창호가 이끌었던 흥사단·수양동우회 계열과 서북지역 기독교 계열, ③ 이상재와 이승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동지회·흥업구락부 계열과 기호지역 기독교 계열, ④ 기타 민족주의 세력(천도교 포함)과 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우파) 세력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한민당 초기 조직은 ①의 세력이 주도하고, 기독교 양대 계열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결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³⁶⁾

한민당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해보자. 우사 김규식의 비서실장으로 좌우 합작과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송남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³⁷⁾

34)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746쪽에 재수록된 동아일보 기사(1982. 6. 3 ~ 6. 11).
35)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669~687쪽; 윤덕영,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역사와 현실》(제80호, 2011. 6), 278쪽.
36) 윤덕영, “1945년 한국민주당 초기 조직의 성격과 주한미군정 활용,” 245~292쪽. 기독교 계열에 관해서는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2 : 2007년까지》, 39~41쪽 참조.
37) 송남헌, “민족진영의 결집,” 동아일보, 1982. 7. 6 ~ 7. 7. 이 기사의 해당 부분은 (재)고하송진우기

“창당 당시 한민당의 지도부는 총무단이나 중앙집행위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인사 및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였던 인사, 1920년대 후반으로부터 1930년대 전반 국내에서 노동운동 내지 농민운동, 사회주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투신하였던 인사, 심지어 당시 전문학교 강단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강의한다고 ‘붉은 교수’로 지목되었던 교수 출신, 구미지역에서 전형적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인사, 고루한 민족주의자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제에 충성을 바친 친일분자만은 아니었다, 혹 하부조직에 그러한 인물이 몇 사람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한민당 전체의 성격 규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상돈은 1947년 《신태평양지》지에 실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³⁸⁾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오히려 공산진영에 압도적으로 많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공산당 간부인사 박헌영, 이관술 등을 제외하고는 거개가 친일파이며 부일 협력자이며 [...] 일제 시대에 매일신보, 경성일보에서 왜적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 문필보국을 하던 악질 언론인과 신문기자가 공산당원이 되어 [...] 일제에 충성을 다하던 분자들이 민전(民戰) 산하의 문학가 동맹의 중요직을 차지하여 인민문학을 운운하며 반동문학 타도를 절규하는 기관기상(奇觀奇相)[...]”

윤덕영의 연구에 의하면, 한민당 간부와 일반 당원을 포함한 참여자로 보아 김약수, 박명환, 원세훈, 유진희, 정노식 등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10% 정도는 되고,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 중 친일 혐의 인사는 14%이었다. 이에 비추어, 초창기 한민당의 성격을 극우, 보수, 친일로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³⁹⁾

한민당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세력의 연합 형성에 성공한 것은 고하가 중심적 역할의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고하가 피살되자 초기 한민당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중추적 지도자를 잃은 한민당의 조직은 정국이 격동하는 와중에서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 고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사회민주주의자 대부분이 탈당하였다. 고하와 가까웠던 김병로를 비롯해 당대 진보적인 민족주의 세력도 이탈하였다.

한민당의 5대 강령은 “①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 ② 민주주의 정체 수립, ③ 근로대중의 복리증진, ④ 민족문화 양양(昂揚)과 세계문화에 공헌, ⑤ 국제헌장 준수와 세계평화 확립”이었다. 아울러 8대 정책은 “①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 ② 호혜

남사업회, 《거인의 숨결》, 760쪽.

38) 위의 책, 761쪽.

39) 윤덕영, 위의 글. 한민당의 조직에 관해서는 심지연, “한국민주당의 연구,” 《한국민주당연구 I》(서울: 풀빛, 1982); 심지연, “한국민주당의 구조분석,” 《한국현대정당론》(서울: 창작과비평사, 1984) 참조.

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③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④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⑤ 중공주의(重工主義)의 경제정책 수립, ⑥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관제(官制) 관리(특수한 국가적 요청이 없는 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되), ⑦ 토지 제도의 합리적 재편성(경자유전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⑧ 국방군의 창설”로 열거되었다.⁴⁰⁾

한민당 강령에는 당 대표자 고하의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잘 스며있다. 강령을 보면, 조선민족은 자주독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완성하고, 고유한 문화를 드높이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며 국제 평화를 증진할 것을 주창했다. 그런데 강령 제3항에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넣어 주장한 것은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갖는 진보적 성격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역설했던 고하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강령을 실천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의 합리적 재편성, 즉 토지개혁으로 연결되었다.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정책으로서 토지개혁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토지의 전면적 국유화와 경작권의 무상분배와 크게 다르다. 그것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재편성으로 표현되었다.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해방정국에서 고하의 건국 활동은 그 기저에 극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노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45년 10월 10일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남한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임을 선언했다. 이것은 인공을 부인하는 성명이었고, 남한의 공산화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남에서 활동하는 정치 세력은 건국의 완성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군정의 협력이 불가결함을 의미했다.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반공·반소·반좌파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그 때문에 고하와 한민당은 이승만과 제휴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고하의 한민당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하기 위해 23일에 결성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에 참여하였다. 고하와 이승만의 노선은 일치하여 긴밀히 협력했으나 이승만이 한민당 활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11월 23일 김구를 비롯한 임정요인 제1진이 귀국하였다. 12월 19일 국민대회준비회는 서울운동장에서 임정 귀국을 환영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임정봉대론을 내세웠던 고하와 한민당은 임정 세력을 환대하였다. 고하의 임시정부 환영사는 임정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윤봉길 의거를 “지도”한 김구 주석 양인을 거명하며 임정의 공헌에 환호를 보냈다. 그리고 임정이 구심점이 되어 국내에서 영도력을 발휘하고 대외적으로 연합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¹⁾

임정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정과 원만하게 협력하지 않았다. 임정의 김구 세력과 이승만의 독촉 간에도 거리가 있었다. 고하의 임정 환대

40)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681쪽; 《거인의 숨결》, 326~328쪽.

41)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183~184쪽. 1945. 12. 19. 동아일보에서 재수록.

에도 불구하고 임정 요인들은 친일행각을 운운하며 “국내인사숙정론”을 거론하여 고하와 임정 지도자들 사이에는 차츰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⁴²⁾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사이에도 알력이 생겨 좌우합작은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1945년 12월 22일 고하가 라디오 방송으로 한민당의 정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동아일보 12월 23일 자에 보도되었다. 이 연설에서 고하가 정치적 측면의 자유민주주의 말고도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고 한 것이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⁴³⁾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재하는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띤 중요 산업은 국영화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 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 방법을 단언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부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 겸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보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습니다.”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민당은 지주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표한 반동적 정당”이라고 비난했다.⁴⁴⁾ 그런데도 한민당과 그 수뇌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관념 아래 경제적 균등의 기회, 근로 대중의 복지, 대자본과 독점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그리고 경자유전의 토지제도 등을 만천하에 내세운 점은 크게 주목받는다.⁴⁵⁾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한 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하는 독립된 국가의 경제생활 질서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당시의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판단했다. 고하는 자유권과 동시에 생존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소작농을 착취하는 대지주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당대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 고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을 혼합한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공익사업의 국영화와 국민 복지의 확충을 추진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지 않더라도, 피폐해진 농민대중의 민생에 당면하여 경자유전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마련하지 않

42)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700~714쪽. 이현주의 논문, “8.15전후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조선정치세력의 대응 -민족주의 우파의 선택과 국민대회준비회”는 고하와 임정관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43) 위의 책, 682~683쪽.

44) 박헌영,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심지연, “고하 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 405쪽에서 재인용.

45) 심지연, “고하 송진우의 사회관과 경제관,”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위의 책.

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하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통제적 경제정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민당의 지도자 고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로서 수정자본주의 경제 이념을 수용했다.⁴⁶⁾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한 주장이 사회주의 계열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김명구 교수는 고하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그의 동지인 장덕수와 조병옥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로 보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장덕수와 조병옥을 이끈 월남 이상재의 신학적 입장이다. 1920년대 이래로 이상재, 장덕수, 조병옥을 포함한 YMCA 흥업구락부 인사들은 사회적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공평한 경제적 분배가 기독교 정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길로 믿었다.⁴⁷⁾ 고하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한민당에 가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고하에 이어 2년 후 장덕수까지 불운하게 서거하면서 토지개혁, 경제운용 계획, 기간산업과 대기업 관리 등 경제 분야의 한민당 정책은 초창기 나타났던 개혁 성향을 점차 상당한 정도로 상실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결정이 28일과 29일 국내에 알려졌다. 합의문 전모가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 신탁통치 조항만 크게 부각되었다. 임정 세력은 “맨주먹 붉은 피로써” 미군정과의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반탁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고하는 미군정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반탁하자는 주장을 피력했다.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고하는 경교장에서 격론을 벌였던 것이다. 고하는 결코 찬탁을 주창하지 않았다. 29일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이름으로 “최후까지 투쟁하자”라는 담화를 내고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⁴⁸⁾ 미군정을 정면으로 부인한 임정 지도자들과 달리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독립 정부를 수립하는 방법론을 이성적으로 조리있게 주장했다.⁴⁹⁾ 고하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신념, 경험과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가올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져 요동치기 직전 고하는 12월 30일 새벽 56세의 나이로 암살되는 비운을 맞았다.⁵⁰⁾

VIII. 맺음말

민족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자이었다. 고하는

46) 양준석, “송진우의 국제지역 인식과 국가건설 사상,” 《문화와 융합》 (44:10, 2022), 451~469쪽;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심지연의 “고하 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과 “고하 송진우의 사회관과 경제관” 참조.

47)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1》, 465~469쪽; 김명구, 《한국기독교사 2》, 38, 41~43쪽; 김명구,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기원-기독교사적 접근,” 해위민주주의연구원 춘계학술회의(2018. 5. 2.) 발표논문.

48) 동아일보(1945. 12. 29)가 보도한 담화는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186쪽.

49) 현장에 있던 청년 강원용은 “그분이[고하가] 정세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방송만 듣고 전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선 것은 경박한 일이었다”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2004. 1. 19)는 위의 책, 845~850쪽.

50)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독립을 향한 집념》, 715~726쪽.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뇌하고 실천하며 목숨을 바쳤다. 그는 민족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 언론과 정치 활동에 헌신하였다.

민족주의자 고하는 구한말 국운 쇠망기에 태어나 유소년부터 한학을 익히며 배워오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내면화하였다. 그는 적을 치기 위해서 적을 제대로 알아야 했기에 일본에 유학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에 관한 사상을 수용하여 그의 민족주의 사상은 심오해졌다. 고하의 민족주의는 조선민족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신중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하는 중앙학교에 재직하며 민족독립을 위한 3.1운동을 기획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의 주도자로서 일제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감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민족은 자유를 갈구하며 민주국가를 수립하겠다고 각성하였다. 조선민족이 만방에 표출한 자유민주의 독립 의지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을 가져왔다.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하의 동아일보 언론 활동은 문화 민족주의적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정치적 실천이었다. 고하는 언론 활동으로 일제에 의해 동아일보가 세 차례 정간과 폐간을 강요당하며 자신은 두 번이나 영어의 몸이 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고하는 조선민족의 불멸을 굳게 믿었으며 일제필망론을 의심하지 않았다. 민족언론인 고하는 일제의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반민족 친일 행위를 거부했다. 불굴의 항일 민족운동을 실행한 것이다.

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수용하였다. 당대에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자가 되었다.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식하였다. 고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자유권과 생존권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다. 계급 간 불평등을 가져오는 자본주의 병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폭력혁명을 옹호하는 공산주의는 배격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접목되는 사회민주주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 고하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가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보완책으로 인정했다. 그러한 점은 고하가 수석총무로서 이끈 한민당의 개혁적 경제정책에 반영되었다.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자 고하는 해안과 선견지명으로써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였다. 해방 직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국가건설의 완성을 위해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며, 현실 정세를 꿰뚫어 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조선총독부와의 대의에 어긋나는 교섭을 거부했고, 공산주의 세력의 책략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신중한 반탁을 밀고 나가자고 주장했다.

고하는 1920년대 중반에 미소 대결의 전개를 예견했다. 해방 직후 고하는 남한의 적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지키려고 투쟁했다. 현재 시점에서 그의 노선은 옳았다고 판단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공산당 독재

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이 세계사적으로 입증되었다. 경제적 피폐, 강압적 통제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번영과 자유를 향유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하는 포용력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를 중심으로 동조자와 추종자가 모여 서로 협력했다. 초기 한민당의 조직이나 정강 정책은 우파인 민족주의자 세력에 더하여 좌파의 온건한 사회주의 세력까지 집결시킬 수 있었다. 고하는 인재를 두루 받아들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수완을 보여주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일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횡을 삼갔다.

현대한국의 정치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됐다. 고하의 사후 40여 년을 경과하고서 자유민주주의가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에도 한국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퇴보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고 그 품격은 전혀 자부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상으로 더욱 풍부하게 하고 건강하게 지속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이 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이 단기적 정파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좀 더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정치엘리트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포용하여 협력을 얻어내고 확장적 연합을 형성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은 사회 저변에 확산하는 갈등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서로 숙의하며 현명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고하의 자유민주주의는 극단 좌파 세력이 기치를 내세운 공산주의 독재와는 대척적이다. 하지만 풍부한 내용을 가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을 단순히 반공으로 환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이나 이를 신봉하는 인사에 대해서 열려있었다. 고하의 자유민주주의는 당대에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면 고하가 한민당 강령과 정책 관련하여 주창한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그 운영의 절차, 과정,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성과로 산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도 고려하는 실질적 관점을 망각하지 않았다. 고하의 사상은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도 포용적 혁신을 시사한다. 고하의 시대적 고민과 헌신적 실천은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양하고 체제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